

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4. 6. 28.(금) 08:00

2023년도 청년정책 우수기관 발표

- 우수기관 : [장관급] 행안부, 농식품부, 고용부, 국토부, 금융위
(직제순) [차관급] 조달청, 통계청, 병무청, 특허청, 해경청
[시·도] 서울, 부산, 광주, 충남, 제주

□ 국무조정실(실장 방기선)은 6월 28일(금) 「2024년(2023년도 실적) 청년정책 종합평가 결과」를 발표했다.

-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·도가 추진한 2023년도 청년정책의 추진성과, 정책 추진 과정에서 청년과의 소통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.

* 중앙행정기관 평가 부문(배점) : 청년정책 추진성과(50), 청년 참여·소통 확대(50)
시·도 평가 부문(배점) : 청년 참여·주도성(20), 청년의 삶·환경 반영도(20), 청년의 삶 개선도(50), 청년의 정책 이해(10)

- 평가위원은 일자리, 주거, 문화, 복지 등 분야별 정책 전문가와 함께, 정책수혜자인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였으며, 청년 평가위원은 청년DB*에 등록된 청년 중에서 위촉하였다.

*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들을 DB화하고 정책담당자가 이를 통해 청년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한 온라인 서비스(청년DB 누리집 2030db.go.kr)

□ 평가결과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,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우수기관은 행안부, 농식품부, 고용부, 국토부, 금융위(이하 모두 직제순),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는 조달청, 통계청, 병무청, 특허청, 해경청이 선정되었다. 특히, 이번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는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2023년도 정부업무 평가에 반영되었다.

- 17개 시·도 중에는 서울, 부산, 광주, 충남, 제주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. 올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에서는 청년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비중 있게 평가하기 위해 ‘청년의 삶 개선’의 평가 비중을 5점에서 50점으로 확대하였다.

우수기관(직제순)		주요 정책
장관급 중앙행정 기관	행안부	▲청년자립 및 활력 지원(청년마을), ▲청년마을기업 운영, ▲지역주도형 일자리
	농식품부	▲대학생 천원의 아침밥, ▲청년 농촌보급자리, ▲영농정착지원
	고용부	▲청년 일경험 기회 제공, ▲맞춤형 고용서비스, ▲공정채용기반 마련
	국토부	▲청년공공주택 공급 확대, ▲주거 지원 강화, ▲대중교통비 절감
	금융위	▲청년 금융교육, ▲청년 자산형성, ▲전월세대출 공급
차관급 중앙행정 기관	조달청	▲청년기업 공공판로 지원, ▲청년 고용 우수기업 우대, ▲해외조달 전문인력 양성
	통계청	▲청년통계등록부 구축, ▲생애단계별 통계 개발, ▲청년층 의식변화 기획보도
	병무청	▲진로 연계 병역, ▲사회복무요원 학업·취업 지원, ▲중점육성분야 일자리 지원
	특허청	▲IP 인재 양성, ▲IP 기반 창업 촉진, ▲청년 IP 금융지원 강화
	해경청	▲교육·일자리 연계, ▲일터 안전망 강화 및 직장문화 개선 ▲건강 증진·문화 향유
시·도	서울	▲청년 마음건강 지원, ▲서울청년센터, ▲청년취업사관학교, ▲청년인생설계학교
	부산	▲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, ▲워털루형 코업 프로그램, ▲신용회복 지원
	광주	▲청년 드림은행, ▲청년 13(일+삶)통장, ▲일경험드림플러스, ▲인공지능사관학교
	충남	▲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, ▲청년농업인 역량 강화, ▲청년종합실태조사
	제주	▲청년 원탁회의, ▲혁신인재플랫폼, ▲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
- 평가 결과에 따라 다가오는 청년의 날(9월 21일)에는 포상을 추진하고, 보완사항은 소관 기관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년정책을 지속 발전시킬 계획이다.

- 평가를 통해 나타난 정책 추진성과와 개선·보완 필요사항은 각 기관에 전달하여 향후 정책 추진 및 청년과의 소통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.

담당 부서 (총괄·지자체)	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관리팀	책임자	팀 장	김영환 (044-200-1988)
		담당자	사무관	임연화 (044-200-1996)
(중앙행정기관)	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총괄과	책임자	과 장	김민성 (044-200-6323)
		담당자	사무관	조수향 (044-200-6327)

□ 장관급 우수기관

- (행안부) 청년마을을 운영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, 공유주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 방안 추진
 - * ('23년 청년마을) 신규 12개소, 활성화 지원 24개소, ('23년 공유주거) 누적 5개소
- (농식품) 대학생 '천원의 아침밥' 사업을 통해 쌀 소비 촉진과 대학생 영양 개선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
 - * (2017) 10개교/14만명 → (2023) 144개교/233만명
- (고용부) 일대일 상담 기반의 '대학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'를 신설하여 저학년에게는 진로·직업의 탐색과 설계를 제공하고, 고학년에게는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
 - * '23년 12개 대학이 청년 4.3만 명 지원(목표 인원 3만 명 초과 달성)
- (국토부) 청년주거지원을 '임대' 위주에서 '분양'으로도 확대*하여 선택권을 확대하고, 양질의 주택 공급**을 위해 노력
 - * 뉴홈 50만호 중 청년·신혼부부 등에 34만 호 공급 추진 중('23~'27)
 - ** ▲청년의 선호도를 고려, 역세권 및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(통합공공임대, 매입·전세임대), ▲최대 거주기간을 연장(6→10년), 주거 안정을 지원(매입·전세임대)
- (금융위) 청년도약계좌를 개시('23년 51.1만명 가입)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, 가입 편의를 높이기* 위해 노력
 - * 비대면 가입, 가입요건 확인기간 단축(3주→2주), 간편인증으로 가구소득 확인 등

□ 차관급 우수기관

- (조달청) 조달 계약 시 청년고용 우수기업 가점, 청년 창업 기업의 '벤처나라' 지정 심사 우대를 통해 공공조달 진입 촉진을 지원
 - * 벤처나라를 통해 청년기업 385개사가 666억 원 실적 달성('23.10월까지 누적)

- (통계청) 청년통계등록부*를 구축하여 특성별 청년 현황을 신속 파악하여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

* 전체 청년을 대상으로 행정자료 기반의 인구·사회학적 변수를 수록한 통계등록부

- (병무청)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* 운영, 복무 중 자기개발 지원, 전역 후 취업 지원 등 군 복무 청년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

* 전문상담·체험 등이 가능한 상설센터 확대: ('20) 서울 1개소 → ('23) 전국 8개소

- (특허청) 핵심산업과 연계한 대학의 지식재산(IP) 교육을 강화하여 산업 현장 수요에 맞는 '기술-지식재산' 융합인재를 양성

*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중점대학: ('22) 4개 대학→ ('23) 6개 대학

지식재산 선도대학: 4개 대학 248개 강좌, 청년 지재권 출원 97건·기술이전 1건('23상 기준)

- (해경청) 기관 자체적으로 일자리·교육·복지문화·참여권리 분야에 대한 '청년정책 종합시책'을 수립하여 추진

* ▲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, ▲해·수산계 고교 우수 인재 채용, ▲격무부서 청년직원 심리치유 기회 제공 등

참고 2 청년정책 평가 우수 시·도 주요 정책(직제순)

□ 서울특별시

- 청년 마음 건강 지원사업을 통해 10,031명의 청년에게 사전검사·전문가 심화 상담 등 개인별 맞춤형 지원
 - * 참여자의 부정 정서(우울감·불안감) 감소, 긍정 정서(자아존중감, 삶의 만족도) 향상 등 효과

□ 부산광역시

- 지자체-대학-기업 협력의 워털루형 코업(Co-Op) 프로그램*을 운영하여 지역 대학생의 원활한 취업을 지원하는 모델 제시
 - * 이론수업 학기와 현장실습 학기를 연계하여 실무 역량과 학업지식 습득을 지원
 - ** '23년 참여기업 50개사, 참여학생 68명, 참여대학 2개

□ 광주광역시

- 청년 드림은행을 통해 채무 관리 상담, 불법금융피해 법률지원, 금융역량 강화 등을 종합 지원
 - * '23년 재무·채무 상담 447명, 신용회복 및 연체 예방 지원 200명, 금융교육 230명

□ 충청남도

- 청년 삶 파락을 위한 실태조사,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,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지원*을 통해 지역 청년의 정착을 뒷받침
 - * 친환경 농업 기술 지원 9개소, 진로교육 6개소, 온라인 마케팅 교육 4개소, 농산물 품목별 농업기술 교육 지원 10개소 등 운영

□ 제주도

- 제주 청년원탁(주권)회의 운영을 통해 청년이 제안한 정책을 실제 예산에 반영 및 지속 운영*했고, 청년참여 규모를 확대('17: 56명→ '23: 193명)
 - * '23년 정책제안 25건 중 19건(전부 반영 3, 일부 반영 16)은 '24년 예산에 반영 완료했고, 청년의 제안에 따라 추진된 청년자율예산 사업을 지속 운영